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을 위한 논의



✉ 형수경
✉ bluela0@hanmail.ne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니세프(UNICEF)가 지난 8월 발표한 ‘Building back equal: Girls back to school guide’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교육에 지장을 받은 학생은 190개국에서 약 15억 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학생들의 90%에 해당하는 숫자다.

국내에서도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교육부는 개학을 미루다 4월 9일부터 등교 대신 학년별 순차 온라인 개학을 도입했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여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원격수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가 없거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디지털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교사 4,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격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학습 격차 심화’(61.8%)라고 답했다. 교사들은 학습 격차의 원인으로 ‘가정환경 차이’(7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교조는 방역과 등교수업·원격수업, 상담과 생활교육 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학교와 교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UNIC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교육에 지장을 받은 약 15억 명의 학생 중 3분의 1에 가까운 4억6300만 명이 원격수업을 위한 장비가 부족하거나 인터넷 이용

이 어려워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헨리에타 포어 UNICEF 총재는 “4억6300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교육 비상사태를 의미한다.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 및 사회에서 이번 사태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미국 교육전문매체 에듀케이션 위크가 4월 10일 발표한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원격학습의 격차 분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미국 공교육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부유층 학생과 달리 저소득층 학생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확보나 인터넷 접속 자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많은 학생이 생중계되는 수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BBC도 ‘코로나19: 달라지는 아이들...잃어버린 세대 될까?’라는 기사에서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연결뿐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과 부모가 아이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시간적 여력이 있는지도 원격수업에서 차이를 유발하는 조건이라고 보았다. 루벤대학의 사회학자 빔 반 랭커는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살아가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은 원격수업을 받을 적절한 환경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은 계속될 것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원격수업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 및 디지털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황조사, 인프라 구축,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디지털격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서베이 조사부터 디지털 격차 조사항목을 추가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현황조사를 소외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

교육격차의 확대를 막기 위해 원격학습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비용과 시



간이 소요되므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국가와 지자체도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취약계층에게 노트북, 태블릿 PC 등 디지털 장비를 보급하고 주민센터, 복지관, 마을회관 등 지정된 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인터넷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맞벌이 부모 8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가을 학기에 원격수업만을 할 경우 맞벌이 부모의 50%가 온라인 학습을 돕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자녀가 원격수업을 받는 경우 맞벌이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모여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사들의 디지털기기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세심한 준비 없이 원격수업을 시작하게 됐다. 준비가 부족했던 원격교육은 교육격차 확대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교육의 위기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향후 또 다른 바이러스 팬데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전면적인 원격수업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교육, 사회복지, IT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논의를 통한 섬세한 입법이 필요하다.